

중국의 동북아전략과 대한반도정책

김강일 (중국 연변대학 동북아연구원장)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을 논의하려면 우선 방법론적 차원에서 그들의 동북아전략의 목표를 이론분석의 座標로 설정하고 나아가서 그것으로 중국 국가이익에 가장 부합되는 한반도의 理想狀態를 논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理想常態는 중국이 전략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대한반도정책의 근거이다.

중국은 발전공간의 확장, 지역적 경쟁력의 구축, 동북지역 경제 활성화 등 문제들을 동북아지역의 협력체의 구축으로 해결하려 하는바 그 동북아지역 전략의 기본적인 목표는 동북아지역 각국의 협력에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그들의 동북아지역 전략목표의 실현에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한반도의 理想狀態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중국에게 있어서 한반도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협력적인 통일된 한반도이다.

모든 전략이 그렇듯이 그에 따른 정책이란 복잡한 국제관계에 대한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이란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동북아전략 목표에로의 접근을 실현케 하는 한반도 理想狀態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반도의 대중국정책도 그 정책선택의 중요한 전제로 작용할 것이다. 만일 통일한반도가 중국과 대립적인 외교정책을 형성한다고 할 때 중국의 대한반도정책도 대립적인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들이 설정한 동북아전략의 목표의 수정도 가능하다. 즉 한국도 중국의 정책선택을 이루게끔 하는 동북아지역 전략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 한반도는 사실상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익구도를 지니고 있다. 동북아지역 각국의 발전은 결국 이 지역 협력체의 구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시각에서 중국과 한반도지간의 이익구도를 더욱 명확히 인식하고 미래 협력관계 구축의 기반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통일과정에서의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고, 중국은 한반도와의 협력으로 제반 경제시스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만큼 중국과 한반도는 모두 윈윈구도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정책적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목 차

1. 들어가는 말: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의 방법론문제
2. 중국의 동북아전략 기초
3. 중국의 동북아전략 틀속에 서의 한반도의 이상적 상태
4. 한반도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가능한 정책선택
5. 맺는 말: 중국의 정책선택의 가능성과 중한기간 원원구도 창출의 전제

1. 들어가는 말: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의 방법론문제

- 근래에 들어서서 중국의 급부상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따라서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전략목표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고 있으며 내심으로 경계의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음. 특히 한국의 경우, 중국과 북한과의 특수 관계라는 배경으로 인해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전략적인 목표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중국이 동북아지역에서의 패권을 노리고 있으며 또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형성하려 한다는 식의 인식들이 바로 그것임.
-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의 전략적인 의도를 마냥 호의적으로만 볼 수는 없으나, 그것에 대한 판독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다른 나라들의 일체행위를 마냥 위협적으로만 생각할 경우 그 나라의 전략적 의도에 대한 분석은 필연적으로 색안경효과를 나타낼 것이며 따라서 객관적인 답안을 구해낼 수 없을 것임.
- 방법론적으로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을 이해하려면 이론 분석의 參考系가 필요함.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본다면, 방법론적으로 중국과 한반도의 利害關係를 제시해야만 중국이 과연 어떠한 대한반도정책을 펴낼 것인지 하는 문제를 풀이할 수 있음. 다른 측면으로 중국이 동북아지역에서 과연 어떠한 전략을 펴고 있고 또 어떠한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려 하는가 하는 문제를 풀어야만 대한반도정책의 근거인 參考系를 설정할 수 있게 될 것임. 즉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동북아전략의 목표는 중국과 한반도간에 형성될 수 있는 利害구도의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는 것임. 만일 중국의 대동북아전략이 동북아지역의 협력을 최고의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면 중국은 한반도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랄 것이고, 반대로 공격적인 외교로 동북아지역에서의 패권을 추구한다면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므로 하여 북한이라는 전략적인 완충지대를 고수할 것임.
- 현시대 國際行爲範式의 변화를 해독하는 것도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론적인 참고계임. 현재의 한국과 중국의 학계를 살펴보면 많은 관점들에서 냉전시대의 인식의 틀을 감지해 낼 수 있는데 특징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전략목표와 일체행위들을 모두 충돌이라는 틀 속에서 이해하고 있음. 예를 들면 중국의

학계에서는 미국의 일체행위를 모두 중국을 포위하고 억제하려는 전략에서 비롯된 행위로 판독하는 경향이 있음. 한국학계의 중국의 행위에 대한 인식도 이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예를 들면 중조 무역이 고작 27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한국의 학계에서는 이미 북한이 중국의 경제적인 종속국으로 된다는 식의 논의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며 심지어 중국이 북한을 동북제4성을 만들려 한다는 주장도 일정한 영향력을 형성하고 있음. 중국인들의 시각속의 미국은 마냥 공격적이고 한국인들 시각속의 중국은 마냥 의심스럽기만 한 존재인 것임. 이러한 시각들은 현시대의 行爲範式을 제대로 판독하지 못하였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임. 탈냉전 이후 세계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공격적이고 충돌을 지향하는 行爲範式에서 벗어나 협력을 지향하는 行爲範式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인정됨. 인류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세계적인 경제시스템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유일한 지구가 더 이상 충돌을 감수해 낼 수 없다는 인식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음. 즉 세계적인 경제협력의 흐름으로 인해 세계는 충돌을 피하고 협력을 추구해야 할 시대가 도래 했다는 것임. 이러한 시각에서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을 판독하면 새로운 결론도 가능함.

- 본문은 중국의 동북아전략의 목표로 그들의 대한반도정책의 參考系를 만드는 동시에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의 해결에 있어서의 한반도의 중요한 의미를 강조하려 함. 아울러 이러한 논의를 통해 중국과 한반도는 사실상 지대한 이익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 원원구도의 창출만이 그 모두에게 유리한 발전방향이라는 점을 제시하려 함.

2. 중국의 동북아전략 기초

- 중국의 동북아전략의 기초를 판독하려면 우선 중국이 직면하였고 또 반드시 풀어야만 할 문제점들을 이해해야 할 것임. 문제가 없으면 전략도 없다는 시각에서 본다면 중국도 동북아지역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점들을 상당히 안고 있음으로 하여 소위 동북아전략이라고 이르는 그것이 형성되고 있는 것임.
- 중국의 동북아 지역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세 개의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 해결책은 동북아지역에서의 협력에 있다고 인정 됨.
 - 첫째는 區域性적 경쟁력의 구축과 발전공간의 확장임. 중국은 미래

*충돌을 피하고 협력을
지향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읽어야*

**한반도의 분열과 불안한
정세가 동북아시아의
핵심적 문제로 지목돼**

경제적 발전에서의 구역적 경쟁력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 현재의 발전상황에서 중국도 미래 최대의 경쟁자는 미국일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미국과의 경쟁의 기반은 구역적인 경쟁력의 형성에 있다고 인정함과 동시에 미국이 공제하고 있는 유럽과 북미자유무역체와 경쟁을 하려면 반드시 구역적 경쟁력을 형성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구역적인 경쟁력의 형성은 또한 중국의 발전공간¹⁾의 확장을 의미함.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원활히 움직이고 또 새로운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려면 상당한 발전공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됨. 미래 중국의 한 단계 높은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중요한 발전공간은 동북아시아라고 인정됨.

- 둘째는 동북, 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균형 잡힌 발전구도의 창출임. 개혁개방이후 중국은 세계의 주목을 받을 만한 거대한 발전을 이룩하였지만 동시에 지역적 불균형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중국의 발전은 연해지역을 핵으로 한 동남부지역 발전공간에서 이룩된 만큼 발전규모, 자본, 기술 등이 모두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이러한 상황은 제반 시스템의 불균형화를 조성하고 있는데 서부, 북부, 동북부 지역들의 제반 경제계통에서의 지위의 지속적인 하락을 초래하고 있음. 특히 원래 중국의 공업중추로 간주되었던 동북지역의 경제가 장기적인 침체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은 동북지역의 개방도 부족에 있음. 만일 동북아시아에서 다국적인 협력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면 동북지역 경제 활성화, 발전공간의 확보라는 多重利益을 거둘 수 있을 것임. 더욱 중요한 것은 동남아시아와의 거대한 역동관계의 형성으로 새로운 발전의 틀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임.
- 셋째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문제임. 중국의 안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미국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공제, 한반도의 분열 상태와 불안한 정세, 일본의 우경화 경향 등을 꼽을 수 있음. 이러한 문제점들의 핵심은 한반도의 분열과 불안한 정세임. 미국의 공제전략과 일본의 우경화도 한반도의 분열이라는 배경으로 형성되고 있는 만큼 한반도문제가 동북아시아 일체 문제점들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것임. 만일 한반도의 정세가 해빙되어 동북아시아 협력의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다면 미국의 동북아시아 공제전략은 그 기반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일본도 지역협력의 필요성으로 인

1) 발전공간이란 한 개 나라의 활동영역을 가리킨다. 이러한 영역은 다른 나라 혹은 다른 지역과의 원활한 교류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효과는 교류의 활성화에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해 더 이상 우경화를 고집할 수 할 수 없을 것임.
- 중국의 동북아전략의 기초는 또한 세계적인 行爲範式의 변화라든가 틀 속에서 이해해야 할 것임. 만일 세계가 냉전시대의 충돌을 기반으로 한 行爲範式을 형성하였다면 중국의 동북아전략의 기초도 충돌을 지향할 수밖에 없을 것임. 즉 충돌을 기반으로 한 行爲範式이란 적대적인 대상국을 설정하고 있을뿐더러 관념적으로 대방을 견제하거나 소멸하는 것이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기에 서로간의 전략적인 기초도 적대적관계라든가 틀 속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임. 냉전시대, 중국과 한국, 중국과 일본 등 관계가 바로 이러한 것들임.
 - 국제사회의 행위법식이란 국제사회가 認同하는 행위의 법칙 혹은 일정한 규범으로 형성된 행위의 틀을 두고 이룸.2)
 - 현시대 行爲範式의 형성은 두 개 측면의 효과로 나타나고 있음. 그 하나는 아무리 강대한 국가라고 해도 그들의 전략적 목표의 설정은 현시대 行爲範式의 규범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임. 예를 들면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미국은 전례가 없던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시대 行爲範式의 규범을 제대로 판독하지 못한 데 있음. 미국정부는 이러한 전쟁이 명분이 있는가 혹은 없는가 하는 국제사회와 국내 정치세력의 압력을 받아야만 했고 또 민간인을 학살해서는 안 되고 심지어 포로를 학대해도 안 된다는 식의 새로운 행위규범에 시달려야만 했음. 이라크전쟁과 아프간전쟁은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는 미국이 새로운 國際行爲範式 앞에

**중국의 동북아전략의
기초는 세계적인
행위법식의 변화라는
틀속에서 이해해야**

2) 인류역사상 여러 가지 형태의 行爲範式을 형성하였다. 본문의 분석의 편리를 위해 강대국들의 行爲範式을 간단히 살펴 본다. 강대국들의 行爲範式은 주요케 고대의 弱肉强食의 行爲範式, 근대의 植民掠奪의 行爲範式과 현대의 控制協力の 行爲範式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대의 弱肉强食의 行爲範式은 세계적인 유대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고 또 더욱 깊은 유대관계가 필요치 않았던 국가기간 관계의 산물이다. 말 그대로 弱肉强食의 行爲範式이란 행위자의 행위를 규범 할 수 있는 국제적인 환경이 없었기에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먹여버리는 행위방식이다. 지금까지 광활한 영토를 자랑하고 있는 국가들은 모두 이러한 行爲範式에서의 승리자들인 것이다. 근대에 들어서서 세계 각국의 유대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弱肉强食의 行爲範式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자본주의 발전에 필수적인 자원과 시장의 확보를 위한 行爲模式이 형성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植民掠奪이다. 植民掠奪이라고 이르는 行爲範式은 약자를 통치와 약탈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그것을 삼켜버리는 弱肉强食의 行爲範式과는 많은 구별을 지닌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세계는 전례 없는 국가주권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명확한 주권, 영토, 국민 등 관념들을 형성하였으며 따라서 강대국들의 약소국에 대한 行爲範式은 控制協力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즉 세계적인 경제적 유대관계와 행위규범의 형성으로 인해 강대국들이 마음대로 약소국을 삼키거나 지배하는 역사는 종식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강대국들의 行爲範式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는데 주요케 이유가 충분한 간섭, 공제와 상응한 협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전략적 목표이자
국가이익 창출은
동북아지역의 국제적
협력체 구축

무릎을 꿇 사례로 기록될 수 있을 것임. 다른 하나는 세계적인 경제적 유대관계의 형성은 각국으로 하여금 대립, 대항을 피하고 협력을 지향하는 전략적인 기초를 선택하게 되었음. 물론 대립과 대항은 종종 나타나고 있는 일이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협력을 추구하는 윈윈구도의 창출을 전략적인 목표로 설정한다는 것임.

- 현시대 國際行爲範式의 형성에서 세계적인 경제유대관계가 결정적인 작용을 일으켰음은 물론임. 이러한 경제시스템은 또한 각국의 외교정책이 공공연한 공격적인 형태를 지닐 수 없는 이유로 작용함.
- 동북아에서 중국이 직면한 문제점과 國際行爲範式의 변화는 중국으로 하여금 동북아에서의 가장 유리하고 또 합리한 전략적인 목표를 추구하게 할 것임. 중국으로 두고 말하면 가장 큰 국가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동북아지역 전략의 목표는 동북아지역 국제적 협력체의 구축임. 만일 동북아지역에서 국제적인 협력체를 구축한다면 중국은 동북3성과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 발전공간의 확장과 구역 경쟁력의 확보, 동남아와 동북아지역에서의 역동관계 구축, 동북아지역에서의 안보위협 제거 등등의 실리를 챙기게 될 것임. 요컨대, 중국은 동북아지역에서 대립과 충돌이 아닌 협력의 지향으로 그 전략적 기초를 형성할 것이며 또 이러한 전략적인 기초는 상당한 기간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임.

3. 중국의 동북아전략 틀 속에서의 한반도의 이상적 상태

- 등소평은 개혁개방초기 세계는 중국의 발전에 필수적인 戰略機遇期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적어도 50년이 될 것이라고 내다 봤었는데 세계적인 行爲範式의 변화는 중국에게 더욱 긴 戰略機遇期를 형성해 줄 가능성이 큼. 현재 중국은 지역적인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외교정책을 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戰略機遇期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중국의 거대한 발전을 이룩하려는 대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음. 이러한 대전략의 큰 틀로 동북아지역 전략을 읽어 보면 중국의 최선의 선택은 가급적 대립과 충돌을 피하고 지역적인 협력을 피하는 것밖에 없음. 만일 중국이 공격적인 대외전략을 추진하고 또 지역적인 패권을 노린다면 주변국들의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팽창할 것은 물론 그것은 주변국들과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라는 공동한 대응을 불러 올 수 있음.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틀 안에서 주변국들과의 유대관계의 증대로 강대국을 실현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임.

-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을 이해하려면 중국의 동북아전략의 목표를 參考系로 설정하고 그것으로 중국에게 있어서 한반도의 어떠한 상태가 가장 理想적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여 그 정책에 필수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임. 중국의 전략적 목표에로의 접근이 한반도의 어떠한 상태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면 그러한 한반도의 상태는 중국이 요구하는 이상적 상태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반면 중국의 전략적 목표에로의 접근을 저지하는 상태는 불리한 상태라고 인정할 수 있음.
-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을 이해하기 위해 미래 한반도의 가능한 변화진로를 가설하고 그것들이 중국의 동북아전략목표에 주는 영향을 분석해야 함. 우리들이 설정 가능한 한반도의 상태는 아마 네 가지일 수 있는데 그것들이 중국에 끼치는 영향은 상당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음.
 - 첫째는 현 상태의 유지임. 한반도의 현상유지란 소위 불통불란의 상태라고 이해 할 수 있는데 적어도 지금과 같은 남북지간의 대립은 있어도 충돌은 없는 온정한 상태를 가리킴. 많은 한국과 일본의 학자들은 중국은 실지로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선호한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인 완충지역으로 간주하고 있고 또 남북한과의 等距離외교에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정치적인 이익까지 챙긴다는 것들을 제시하고 있음. 논리적으로 북한이 지역적인 熱點을 형성하였고 또 중한관계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기에 북한을 더 이상 중국의 전략적인 완충지역으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임. 얼핏보면 중국이 남북지간을 오가면서 실리를 거두는 듯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결국은 6자회담과 같은 국제회의에서의 발언권이나 몇 개 확보했을 따름이라고 인정하게 될 것임. 한반도의 현상태 유지는 오히려 중국의 동북아지역에서의 협력 이익을 실현할 수 없을뿐더러 그것으로 인해 한반도의 폭발성적인 에너지가 대량 축적되고 있기에 중국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 즉 중국에게 있어서 한반도의 현상유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지 이상적인 상태는 아니라고 인정됨. 한반도가 중국과 동북아지역을 연결하는 요충지에 있다는 것이 보다 중요함. 만일 한반도가 지속적인 현상유지 상태에 처한다면 중국이 설계한 동북아전략이란 백지에 불과할 것임.

**북한을 더 이상 중국의
전략적인 완충지역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

중국에게 있어서
한반도의 급변 사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

- 둘째는 한반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급변사태임. 급변사태란 무력충돌을 포함한 각종 위기 상황을 가리키는데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중국은 버금가는 피해국이 될 것임. 예컨대, 만일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난다면 중국은 수백만을 헤아리는 난민의 충격에 빠져 들어 갈 것이며 또 동북아지역의 혼란 상태로 인해 경제적인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임. 중국에게 있어서 한반도의 급변사태란 최악의 시나리오임.
- 셋째는 북한의 개혁개방으로 형성될 수 있는 한반도의 연착륙상태임. 현재 북한은 완고하게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있지만 그 엄청난 경제난의 타개책은 개혁개방에 있을 것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정한 시간을 거친 대외 경제적인 교류로 인한 경제유대관계의 형성으로 북한도 어쩔 수 없이 개혁개방의 길을 걸어가야 할 가능성은 존재함. 요즘 북한의 시장경제의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북한정부는 어쩔 수 없이 시장경제의 확장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음. 물론 북한의 개혁개방이란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될 것이며 북한내부에서의 엄청난 진통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나 한반도문제의 해결의 한 개 중요한 진로로 될 것임. 만일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을 걷는다면 중국으로서는 환영할 것임. 북한의 개혁개방은 중국에게 그 동북아전략을 실시할 수 있는 전제를 형성해 줄 것이며, 또 동북3성의 경제활성화와 지역적 안정이라는 거대한 이익을 안겨주게 될 것임. 이러한 상태는 중국이 환영할 시나리오이나 체제의 유지를 기반으로 하는 개혁개방은 상당한 시간을 소요 할 것이며 또 그 체제자체의 방향도 불투명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넷째는 남북한의 통일임. 남북한의 통일이란 한반도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과의 총체적인 협력과 개방을 의미하는 중대한 사건임은 틀림없음. 만일 이러한 상태가 형성될 수 있다면 중국은 최대의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주변국으로 될 것임. 그 이유는 한반도의 통일은 중국에게 全方位적인 개방으로 동북아진출의 장애물을 제거해 줄 것이며, 따라서 동북아지역의 미국의 영향력 감소라는 안보이익도 안겨 줄 수 있을 것임. 많은 학자들은 중국이 한반도통일로 인한 미한동맹의 강화를 근심하고 있기에 한반도의 통일을 내심 바라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향후 중국의 발전을 염두에 둔다면 이러한 관점들은 그렇다고 할 만한 근거가 없음. 오히려 한반도의 통일은 동북아지역의 협력을 가속화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동북아지역 각국의 전략적인 취향은 경제적인 협력으로

쏟릴 수 있기에 중국에 대한 안보압력은 감소할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이 더욱 설득력을 지님.

- 상술한 네 개의 시나리오를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동북아전략이라는 틀에서 분석하면 분명한 결과가 나타남. 즉 중국에게 있어서 미래 한반도의 이상상태는 통일임. 물론 북한의 개혁개방도 중국에게 상당한 이익을 안겨줄 수 있지만 동북아 진출의 길을 완전히 열어주었다고 보기 어렵기에 비교적 이상적인 상태라고 인정될 수 있음. 물론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한다는 데에도 많은 조건이 있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중국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지지하지 않을 이유도 별로 없음.

4. 한반도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가능한 정책선택

-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문제란 한반도의 분열 상태와 북한의 미개방상태가 중국에게 끼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인정될 수 있음. 북한의 미개방상태, 경제시스템의 붕괴, 핵개발 등은 한반도문제를 상당히 복잡한 형태로 끌어가고 있음.
- 중국으로 두고 말하면 한반도문제란 엄청난 골칫거리임.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가치가 부각될 때 마다 중국은 최대 피해국이 되었었음. 갑오전쟁, 러일전쟁 그리고 한국전쟁에서 중국이 치른 비싼 대가가 바로 이 점을 증명해 주고 있음. 한반도는 비록 작은 지역이지만 근현대에 들어서서 동북아각국의 전략이 이곳을 통해 전개되었다는 사실이 한반도는 동북아에서의 극히 전략적의미를 지닌 요충지임을 설명함. 역사가 남겨 준 교훈이 그렇듯이, 각국의 전략적인 초점이 한반도에 맞추어 질 때, 그것은 중국에게 이로운 점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위험한 상태를 초래했다는 사실로 인해 중국은 당연히 한반도문제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현재 한반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중국이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가 평화적이고 협력적이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반면, 한반도의 그 어떤 형태의 긴장상태이건 모두 중국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음. 하기에 한반도문제의 해결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아마 중국일 것임.
- 그렇다고 중국이 무작정 한반도문제의 해결에 나설 수는 없을 것임. 그 이유는 한반도문제란 상당히 복잡한 국제관계의 배경으로

*한반도의 통일은
중국으로서는 동북아
진출의 장애물을
제거하게 되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의
기초는 통일된 한반도와
중국과의 윈윈구도
창출로 경제발전과
안보이익의 극대화 추구

형성되었고 또 한반도자체의 향방이 중국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데 있음. 예컨대 만일 한반도의 통일이 중국과의 협력적인 한반도의 출현을 의미한다면 중국으로서는 지지하지 않을 수 없는 반면, 그것이 중국과 대립적이고 또 미국과의 동맹관계의 강화를 추구하는 면모를 띠면 중국으로서는 오히려 한반도통일을 위협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임.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협력적인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대한반도정책의 기초라고 인식될 수 있음. 만일 한반도문제의 해결이 궁극적으로 중국에게 불리한 국면을 초래한다면 중국으로서는 한반도문제를 해결하려는 목표 자체가 문제시 된다고 인식할 수 밖에 없음.

-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의 기초는 최대국익의 창출이라는 전제에서의 한반도통일지지임. 통일된 한반도와 중국과의 협력적인 관계의 구축으로 윈윈구도를 창출함으로써 중국의 경제발전과 안보이익의 극대화를 이룩하려는 것임.
- 미래 동북아지역의 정치구도의 변화, 한반도의 정책적인 향방 등이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에 영향을 끼칠 것임. 중국의 한반도정책은 그 정책선택의 근거로 될 수 있는 한반도의 정책과 관련됨. 만일 통일된 한반도(한반도의 통일이란 막을 수 없는 대세라면)가 중국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대폭 지지하는 방향으로 대한반도정책을 전개할 것인 반면 통일된 한반도가 미국과의 동맹관계의 강화, 영토문제 분쟁화 등 대립적인 정책을 추구한다면 중국으로서는 동북아에서의 거대한 이익창출이라는 전략을 수정 또는 포기할 수밖에 없을 뿐더러 한반도의 현상유지라는 정책을 펴내갈 가능성이 커짐. 현재 중국의 학계의 “한반도통일위협론”과 “한반도통일이익론”간의 토론이 바로 이러한 정책선택의 고민을 반영하고 있음.
- 필자는 중국의 미래 한반도정책은 “한반도통일이익론”의 전제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봄. “한반도통일위협론”이란 중국의 상당한 학자들이 아직도 자신심 부족이라는 심리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해 형성된 관점들임. 약소국이 그렇듯이, 다른 나라들의 행위에 대해 항상 위협적으로 인식하고 또 그것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은 실지로 자국의 힘에 대한 자신심 결핍으로 인해 형성된다는 것임. 만일 한 개 나라가 막강한 국력을 형성하였고 또 주변국 혹은 세계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친다고 할 때 그들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주변의 환경 즉 국가기간관계를 조절할 능력을 지닐 수 있음. 요컨대 소위 강대국이란 그들의 전략목표에 따라 적극적으로 국제 정세를 조절할 능

력을 가진 나라라고 인정할 수 있음. 현재 중국은 미국과 대등한 위치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은 없으나 지역적인 국제관계를 자신들의 목표에 따라 개변할 수 있는 능력은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만일 중국이 현재의 발전추세를 상당 기간 유지해 나간다면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력의 확대로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많은 우려를 해소할 능력을 지닐 것임. 중국이 막강한 영향력을 형성한다고 함은 중국의 주변 환경을 개변할 수 있는 能動性을 의미하는 동시에 주변국들이 중국에 대한 대립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낮아짐을 의미하기도 함.

- 중국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 한반도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함. 혹은 강대한 중국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미국과 일본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거나 혹은 중국과의 관계를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시키거나 모두 한반도의 선택과제로 되는 것임. 하지만 중국과 인접하고 있는 한반도를 두고 말하면 가장 가능한 정책적인 선택은 미국과 중국기간의 등거리 외교 혹은 중립적인 외교 기조라고 전망될 수 있음. 만일 한반도가 대중국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정책을 펴내간다면 중국은 물론 환영하겠지만 중립적인 정책만 펴낸다고 해도 중국으로서는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
- 중국내의 “한반도통일위협론”과 “한반도통일이익론”의 논쟁에는 한 개 분명한 공통적인 인식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한반도와의 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공감임. “한반도통일위협론”의 전제는 통일한반도가 위협적일 수 있다는 가설에서 비롯된 만큼 통일한반도가 결코 중국과의 대립적인 외교정책을 펼 수 없다는 인식이 객관성을 띠다면 중국의 정책적인 기조는 “한반도통일이익론”을 기반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것임.
- 중국의 대북정책은 또한 한국의 일부 학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한반도정책의 한 개 중요한 부분임. 냉전이 종식되면서 중국과 북한의 혈맹적인 동맹관계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음. 중국의 개혁개방과 북한의 폐쇄성은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두 나라의 정책기조상 옛날의 혈맹적인 동맹관계가 많이 퇴색할 수밖에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은 여전히 일정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 특수한 경우 그것을 표방하려 하고 있음. 이러한 점으로 인해 많은 학자들은 중국은 북한을 여전히 미국과의 대립의 전초기지로 보고 있기에 핵문제와 같은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까지 북한을 두둔해 나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 중국학계의 많은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중국은 대북정책에서의 깊

냉전종식 이후 중국과
북한의 혈맹관계
퇴색불구 여전히 일정한
우호관계 유지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는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북한과의
경제적인 유대관계 구축

은 딜레마를 안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개혁개방으로 중국과의 정책적인 일치성을 형성하고, 더 이상 지역적인 열점으로 되지 말아야 하며, 중국과의 정치, 경제의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일 것임. 하지만 현재의 북한은 중국의 이러한 희망 사항들에 대해 하나도 만족해 주지 않고 있음. 북한의 폐쇄적인 정책은 동북아지역의 斷裂帶를 형성하고 있는데 중국의 동북아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로 지목 되고 있음.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의 대중국 압력을 완충해 준다고 말하고 있지만 곰곰이 분석해보면 오히려 북한과 미국 지간의 相互依存적인 대립관계가 미국의 대중국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설이 더욱 설득력을 지닐 수 있음. 설상가상으로 북한의 핵개발은 중국에게 커다란 안보문제를 조성하고 있는데 중국으로서는 부담거리가 아닐 수 없음. 그렇다고 중국이 북한을 완전히 배척하고 고립시키는 정책을 펴기는 어려울 것임. “핵을 보유하면 지원할 수 없다”, “북핵문제로 인해 발생한 전쟁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순치관계인 북한을 몰아붙이고, 정권을 화해시키는 데 앞장설 수는 없음. 중국의 북한에 대한 강경한 압박조치는 그 의도와 달리 동북아에서 분쟁과 혼란을 촉발할 수 있고, 반대로 북한을 지원하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과 압력에 직면할 것임.”(문대근: 『한반도통일과 중국』, 297쪽. 늘봄플러스, 2009). 이것이 바로 중국이 직면한 딜레마라고 할 수 있음.

- 필자는 중국의 대북정책의 기조는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 북한과의 경제적인 유대관계의 구축에 두고 있다고 인정함. 물론 구체적인 정책 실시 과정에서 강경한 입장 혹은 유연한 입장을 취할 수 있으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을 적극적으로 개변하여 동북아지역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데 있다고 봄.
- 중국의 외교 전략의 가능한 선택을 한 개 가설로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음. 일본과 한국의 소수 극단적인 학자들은 중국이 동해 진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음으로 하여 사실상 북한을 통제하고 나아가서 북한을 정복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들의 가설로 그 후과를 생각해 볼 수 있음. 만일 중국이 이러한 假想한 전략을 현실화 한다면 한국, 미국, 일본의 거센 항의는 간단하게 상상할 수 있는 후과임. 한걸음 더 나아가 유엔의 대중국 제재가 개시되었다고 상상해 볼 수 있음. 그렇다면 대외무역의존도가 64%에 달하는 중국은 제반 시스템의 붕괴라는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임. 여기에서 중국이 과연 이러한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한반도에 대한 공격적인 외교를 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됨. 더욱이 발전의 평화적인 환경마련에 주력하고 있는 중국이 주변국과의 마찰을 야기할 수 있는 공격적 외교를 펼친다면 전략과 그 도경선택의 갈등을 빚을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임.

5. 맺는 말: 중국의 정책선택의 가능성과 중한지 간 원원구도 창출의 전제

- 중국의 동북아전략 기초가 대한반도정책에 끼치는 영향과 대한반도 정책을 절대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음. 왜냐하면 한 개 나라가 추구하는 전략은 반드시 복잡한 국제환경에서 실현해야 하므로 다른 나라들의 정책, 전략 그리고 현실적으로 나타난 문제점들이 그것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제정된 전략이라 할지라도 수정 혹은 포기도 가능하기 때문임.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소위 전략적인 목표란 가설할 수 있는 이상상태에 대한 추구라고 말 할 수 있음. 즉 국제관계의 각종 변수들이 중국의 대동북아전략 혹은 대한반도 전략의 기초를 바꾸어 놓을 가능성은 수시로 존재한다는 것임.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과 중국은 그 전략적인 兼容관계의 형성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서로간의 이익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또 서로 이로운 원원구도의 창출을 목표로 설정한다면 중국의 적극적인 대한반도정책의 수립에 새로운 힘을 실어 줄 수 있을 것임. 서진영교수는 “부강한 중국의 등장과 강대국관계의 변화가 한반도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에게 있어서는 경제차원 뿐 아니라 정치외교적 차원에서도 기회라고 주장하고 있음. (서진영: 『21세기 중국외교정책: “부강한 중국”과 한반도』. 폴리테이아. 313쪽) 필자도 이러한 관점에 동감함.
- 현재 한국의 학계에서는 중국이 과연 어떠한 대한반도정책을 펴낼 것인가 하는 문제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나, 한국은 도대체 어떠한 정책을 펴내 중국으로 하여금 한반도에 유리한 정책을 선택하도록 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로 논의하지 않고 있음. 실지로 한 개 나라의 전략적인 선택이란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 전략적인 선택의 근거는 상대방의 전략적인 기초인 만큼 한국의 대중국정책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한국학계는 마

*한국은 중국으로 하여금
한반도에 유리한 정책을
선택하도록 하는 정책을
펴야*

땅히 통일에 대한 가설을 전제로 한반도의 대중국정책의 기초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임. 만일 이러한 논의에서 통일한반도의 대중국정책이 협력적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논증해 낸다면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선택의 중요한 근거를 마련해 줄 것임.

- 중국과 한반도지간의 원원구도 창출의 전제는 쌍방에게 모두 유리한 이익구도의 형성임. 현재 중국과 한국의 학계에는 냉전시대의 사유방식이 널리 존재하고 있으므로 하여 중한지간 이익구도 창출의 장애를 형성하고 있음. 중한지간의 이익구도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으로 정책선택의 전제를 형성한다면 중한지간의 원원구도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5-651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